

# 국감 점령한 ‘대장동 사태’... 與 “검찰수사” vs 野 “특검”

국토부·기재부 국감 스타트 국힘, 대장동의혹 피켓 설치 설전·피켓 시위 등에 파행 부동산 정책 노형욱 질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 ◆ ‘피켓대전’ 국감 지연... 여야 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간 설전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 각 좌석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부착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국토위 국정감사는 시작된 지 50여 분만에 정회됐으며 기재위는 피켓 제거문제로 오전 감사가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인물로 떠오른 유동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데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쇄물 제거 문제로 지연되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가 특검을 거부하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캠프는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은 국토부와 피감기관이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살펴봐야 하는 자리”라며 “왜 국회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한 증인채

택과 자료제출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라며 “이런 것을 부작하는 것도 소수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 국토부 질타, 노형욱 “205만가구 공급 기반 마련”

국정감사는 당초부터 대장동사업 의혹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로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대장동 사업은 지난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이 사업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택지개발의 법적, 행정적 실무를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날 출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조사 권한이 없고 지정권자가 성남시에 해당된다”며 “제도 개선 관련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진 3기 신도시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완화에 주택 수를 늘릴 계획이 없다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 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3%에 달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7734만원이다.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6억708만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현상이 이어진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자산가격이 오른 결과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8·4대책과 2·4대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가 주류를 이뤘다. 26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31만가구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는 2~3년 뒤인 만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가격 하락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정기적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다.

노 장관은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했고, 올해에도 전국 4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2·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수단과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서 205만가구의 공급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부족시 기금 동원”

홍남기, 기재위 국감서 지원책 밝혀 “내년 예산 증액여부, 국회서 논의”

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이 컸던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예산 부족시 기금 등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

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 중 1조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의 내년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가 커지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지원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대출 거처·상환 기간 연장, 신용회복위 채무 조정 등 취약계층 채무경감 노력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위험 등에 유의하며 재정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발행도 재개하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다음 달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등 대규모 할인 행사도 준비 중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환경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시나리오 확정 지을 것” 야당 “사실상 불가능” 비판

2030년 감축목표 35%→40% 제시

환경부가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간 논란이 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안 상향 여부도 연내 결정한다. 야당은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정에 환경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무공해 친환경차 보급, 녹색산업 지원 등을 담은 ‘2050 탄소중립’ 목표안을 발표하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9%포인트 상향한 35%를 2030 NDC 하한선으로 뒀다.

하지만,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NDC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35%에서 5%포인트 높은 40%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 관련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금처럼 시간에 쫓겨 대통령 지시대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며 “최소 시나리오별 실행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산정해 보는 등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 공정위 “카카오 등 플랫폼, 수수료 산정방식 일괄 조사”

조성욱 위원장, 조사 의사 피력 플랫폼-입점업체 상생에 초점 플랫폼 기업 심사제 지적도 나와

‘공룡 카카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 산정방식에 대한 일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참석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수료 산정방식을 일괄 조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며 골목상권 영향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온플법) 통과 전이라도 공정위가 주요 플랫폼 수수료 산정방식을 일괄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조 위원장은 “온라인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만 해도 180만 업체가 있고 온플법 통과를 위해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면서 “법에는 근거가 없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을 설득해서 (플랫폼 수수료 산정방식조사)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를 기초로 시장에 투

명하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자녀와 가족이 직원으로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심사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은 “5년간 76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했는데, 김범수 카카오 자녀 논란이 된 4건 기업결합이 모두 승인됐다”며 “실질적인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간 이심사한결로 알고 있고, 제도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구글의 앱마켓 관련 지배권 남용 관련해 이탈리아는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국에선 플랫폼 사업자 자산 우대 차별과 금지를 명시한 것과 비교해 국내 경쟁당국 대응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진태미(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조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화에 대해 전세계 경쟁당국의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응방향은 국가별 시장상황이 다르기에 조금씩 다르다. 자사 서비스 우대 정책에 대해 공정위가 엄정하게 보고 이미 몇개의 경우 대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앱마켓에 있어서의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카카오 등 플랫폼 규제 방향을 묻는 홍성국 의원 질의에 대해 일방향 규제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상생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이슈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처럼 인식하고 있고 당연히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규제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다 함께 성장하고 혁신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